

서울대 정체성,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최갑수**

정체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 역사적 정체성, 자기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이 그것이다. 이 세 종류의 정체성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은 거의 언제나 일정한 간극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 정체성과 자기정체성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서울대 정체성의 심각한 문제는 이 세 정체성이 경우에 따라 중대한 결손을 보여 예컨대 국립대로서의 정체성이 최근에 급격히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 사이에 참으로 쉽게 화해하기 어려운 괴리와 오해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대 구성원들의 자기정체성과 외부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틈이 있는 듯 하며, 바로 이것이 현재 '서울대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 필자는 21세기의 서울대가 추구할 정체성의 상(像)으로서 '글로벌(global) 대학'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서울대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위의 연구를 기반으로 서울대의 지식생태계를 '세계성'으로 끌어올리고 '지방성'으로 하방(下放)하는 구체적인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서울대학교, 정체성, 국립대학, 서울대 개교 원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서울대폐지론, 글로벌 대학

* 이 글은 2010년 10월 12일에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가 '대학의 기업화를 넘어 서울대 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문화관 중강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2월 8일, 국회는 '서울대법인화법안'(정식명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직권상정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위 법안의 통과는 '국립서울대학교'의 죽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글은 국립서울대학교의 사망에 대한 일종의 조사(弔辭)라고 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1. 정체성이란?

‘정체(正體; identity)’란 사전적 의미로 “본디의 참 모습”을 말하니 ‘정체성’이란 “만물의 본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것답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뜻한다. 철학적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정체성이란 “개체가 시간과 장소의 상위(相違), 여러 성질의 변화 등을 통해서 그 자체로서 지속되는 것”으로, 사람의 경우는 ‘인격적 동일성’을 말하고, 제도와 같은 것은 ‘시공적 연속성’을 근거로 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참조). 하지만 그 정체성을 문제 삼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연속성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에 기반을 둔 변화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정체성을 운위한다는 것은 서울대라는 한 집단적 인격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문제의식이 이미 발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서울대의 정체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본디의 참 모습”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권위자가 있을 리 없는 만큼, 확인 가능한 정체성으로는 역사적 정체성, 자기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의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역사적 정체성(歷史的 正體性)이란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집단이 탄생하여 겪고 만들어내 오늘에 이르면서 형성한 인격성을 말한다.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이란 그 구성원들이 가진 서울대에 대한 자의식 내지 자기인식을 말하며, 사회적 정체성(社會的 正體性)이란 사회 일반이나 서울대 외부에서 서울대와 그 구성원들에 대해 갖는 인식, 평가, 심지어 편견 등을 통칭한다. 이 세 종류의 정체성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자기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은 거의 언제나 일정한 간극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 정체성과 자기정체성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서울대 정체성의 심각한 문제는 이 세 정체성이 경우에 따라 심각한 결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것들 사이에 참으로 쉽게 화해시키기 어려운 괴리와 오해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대 구성원들의 자기정체성과 외부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사이에는 떼우기 어려운 틈이 있는 듯 하며, 바로 이것이 현재 ‘서울대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실 세 가지 정체성이 일치한다고 하여 꼭 행복한 상태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

도 있다. 특히 해당 집단인격체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정체성의 변형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실을 부여받아 정체성의 새로운 모색을 기하는 경우, 정체성 사이의 괴리는 집단체의 발전을 위한 자기혁신의 계기이기 십상이다. 그러기에 한 집단이 인격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스스로의 면모를 끊임없이 바뀌어나감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좌이며, 더욱이 대학이란 지역사회-국민국가-세계시민주의의 세 차원을 동시에 포괄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식생태계로서 그 정체성의 점검과 새 모색은 차라리 언제나 껴안아야 할 요청이 아닐 수 없다. 이하에서는 서울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세 차원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발전의 방향을 구해보고자 한다.

2. 서울대의 역사적 정체성

공식적으로 서울대학교는 1946년 8월 22일자로 제정된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으로 태어났다(법제처 연혁법령, 1946). 위 법령은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제1조 (목적) 본 영은 조선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활용케 하여써 조선 청년으로 하여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 급 현대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조선인민의 향상을 위하여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이익과 기회를 적의 이용케 함으로써 목적함.”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최근의 한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조선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곧 해방된 조선사회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주도하는 조선인(한반도주민)을 위한 대학이라는 것으로 1946년의 시점이 갖는 역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조선청년 개개인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이 고등교육의 시설이 활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단지 국가주의적이거나 도구적인 관점에서 대학을 구상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셋째, 현대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조선인민’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집합적 주체를 위한 고등교육시설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대학교는 신생독립국가의 열망을 간직한 국립대학으로 출범하였다(박명규 외, 2010: 21).¹⁾

1) 이하의 서술에서는 무엇보다도 서울대학교(2006a) 참조.

이후 개정된 설치령과 현재의 설치령에는 서울대학교의 교육 목적과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고등교육법에 의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칙’ 제2조에는 ‘교육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교는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1946년의 설치령과 비교하면 왠지 무미건조해진 느낌이다. 참고로 맨 처음 설치령의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 달성 방법) 본 영의 목적은 기존 교육 시설을 재편성되는 국립서울대학교에 합동하여 시시로 필요 우는 요망에 응하여 기 외 교육 시설을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기타 필요한 대학, 학부 급 연학 기관을 증설하며 우수한 교수 진용을 정비하고 현 학교 운영상의 결함을 제거하며 행정면에 있어 절약 정책을 수립하고 전 세계 일류 고등 교육 기관의 학술 수준에 필적할 만한 정도로 동 대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감리제도(경쟁 시험 급 기타 방법에 의한)를 창정함으로써 달성함.” 해방 직후 새 국가건설의 열기가 여전히 묻어나고 있음은 필자만의 감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1946년의 설치령과 특히 이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하 ‘국대안’, 1946년 7월 13일)은 이른바 ‘국대안파동’을 불렀다. ‘국대안’에 따르면, 경성대학(문학부, 법학부, 의학부, 이공학부)과 9개 관립 전문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음악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및 사립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일괄 통합하여 종합대학교를 설립한다. 대학 지배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그 아래에 총장과 부총장을 1인씩 두어 학교를 통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농림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9개 단과대학을 두고 그 위에 대학원을 두도록 하였다. 흔히 ‘국대안파동’하면 당시의 정치상황과 연동된 좌우의 대립을 떠올리지만, 이에 못지않게 일본식(사실은 독일식) 대학이념과 미국식의 그것과의 충돌, 경성제대와 전문학교의 갈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성대학과 다른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은 무리라는 점(특히 경성제대 의학부와 경성의전 통합을 둘러싼 갈등), 이사회 설치를 통한 교수자치의 약화, 이사회 구성원의 성격에 관한 문제(미국인, 미국계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발), 그리고 좌익 배제의 습

겨진 의도 등이 갈등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결국 ‘국대안’의 의도대로 종합대학교가 만들어지나 이사회라는 낯선 대학지배구조는 ‘파동’을 살아남지 못해 교수회가 일정한 권한을 갖는 대학자치의 이념이 1949년의 ‘고등교육법’에 반영되었다(강명숙, 2002).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서울대 탄생을 둘러싼 소동 속에서도 그 창설의 의지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우선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의 주요한 동기는 일제하 식민지 교육제도와와의 단절이었다. 그것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새 국가의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강한 열망이 결집된 것이었다. 아울러 그것은 신생국가를 대표할만한 최고 학부를 세우려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국립서울대학교는 애초 최초의 종합대학교로 출범하였다. 서울대가 ‘종합대학교’[university; 단과대학들(colleges)의 결집체]로 시작한다는 정체성은 특히 초창기에는 각별한 의미를 가졌던 듯이 보인다.

이런 탄생과정은 서울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 구도를 규정했다. 첫째, 서울대는 국립종합대학교로 출범했다. ‘국대안파동’은 미국의 주립대학 이념의 도입과 함께 일본식 대학자치의 이념이 잔존했음을 보여준다(우마코시, 2000). 둘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도가 분명함에도 연합대학으로서 경성제대를 포함한 ‘역사적 뿌리’와의 단절 및 연속의 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게 되었다. 셋째, 그 결과로 각 단과대학의 역사적 정체성이 매우 다양하여 서울대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인 정체성의 형성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단과대학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데다가 경영대학, 여러 전문대학원 등의 수입학문분야가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정체성의 다기화, 중층화가 심화되었고, 이런 사정은 캠퍼스의 종합화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는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하였다. 애초 국내 유일의 종합대학으로 출범한데다가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라는 국가발전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서울대는 대학체제의 정점에 올라 독점적인 지위를 배타적으로 누리기 시작했다. 1970년에 제정된 ‘서울대학교 설치령’은 그것의 법적 토대를 제공했고, 이후 서울대는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상당 수준에서 ‘근대성’을 이룩한 이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대의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는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학벌과 대학서열구조라는 사회

적 모순의 진원지로 서울대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가 독자적인 자생적인 학문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지식생산의 면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기실 서울대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대는 참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진지한 자기성찰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학이념의 내용과 그것이 대학 및 학사운용에 반영되는 정도, 서울대가 스스로 편찬한 교사(校史) 편찬의 기준 등을 살펴야 하며, 일련의 통계자료를 통해 ‘서울대인’의 이른바 집단전기(集團傳記)를 구축하는 일이 행해져야 한다. 참고로 현재 서울대가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는 기본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울대학교(2006)에 보이는 시대구분: 창건과 시련 속의 발전(1945~60년), 경제 발전과 대학 종합화의 모색(1960~75년), 대학 종합화와 대학 자율의 진통(1975~94년), 지식기반사회의 전환과 연구중심대학의 모색(1994~2006년).

2) 서울대 누리집에 보이는 서울대 60년사의 시대구분: 개교기(1946년 10월~1953년 9월), 민족의 대학 건설기(1953년 9월~1975년 2월), 대학종합화 단계(1975년 2월~1987년 12월), 대학민주화 실현기(1987년 6월~1999년 12월), 겨레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2000년 1월부터 현재).

3. 서울대의 자기정체성: 자화상으로서의 정체성

1) ‘겨레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먼저 서울대가 누리집을 통해 밝힌 자화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005년 7월 현재 서울대 누리집이 밝혔던 ‘이념과 비전’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21: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

세계수준의 대학: 세계화된 대학, 세계적 수준의 학문 수월성 추구, 국가 사회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

종합(Comprehensive)대학: 기능의 종합화: 종합대학의 3대 기본 핵심기능인 연구,

교육, 사회봉사의 균형발전, 학문의 종합화: ‘Specialization and integration’, 학제의 종합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연계 및 균형발전

연구(Research)대학: 기존 지식의 발전 및 체계화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 세계 수준의 교육, 세계 수준의 사회봉사를 수행

다음으로 2010년 10월 현재의 서울대 누리집에는 이전의 ‘이념과 비전’에 관한 화면은 보이지 않고 대학소개 - 서울대소개 - 역사에 ‘서울대 60년사’에 대한 위의 시대구분을 소개하고, ‘겨레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라는 표제 아래 다음의 구절을 삽입했다.

서울대학교는 1977년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에서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라는 3대 이념을 지정하였는데, 1995년에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을 만들어 그 모토를 이어가면서 ‘국제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을 표방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울대학교는 학부 교육과 기초 교육을 더욱 강화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비약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까지 교육을 세계 최상급 수준으로 격상하고, 2015년까지 학제간 연구의 집중 지원으로 세계 정상급 연구 수준을 확보하며, 2025년에는 세계 정상급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확립하였다.

2) 발전계획안을 통해 본 정체성의 변화

이러한 자기인식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는 서울대가 그간 만들어서 발표한 일련의 ‘발전(계획)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서울대의 자기정체성에서 모종의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하게 된다.

(1) 먼저 서울대 발전계획안의 연대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960년 6월 ‘종합화 7개년 종합계획’
- 1962년 5월 문교부의 지시로 ‘종합화 5개년계획(1962~66)’으로 변경

- 1966년 5월 ‘서울대학교 종합화 6개년계획’ 발표: 대학의 자율성 제고, 캠퍼스의 종합화, 연구재단 설립, 민족 엘리트 양성, 연구활동 활성화 등
- 1967년 11월 대통령의 지시로 위의 ‘계획’은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계획(1968~77)>으로 수정
- 1968년 4월 서울대는 위 ‘계획’을 성안하고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감: “대학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로 발전시킨다”는 목표가 이미 제시됨. 기숙사, 교양과정부, 교과과정 개편, 산학협동, 연구교수제도, 외국과의 공동연구 등
- 1970년 4월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정
- 1977년 12월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계획의 이념과 목표’ 발표
- 1979년 4월 기획위원회, <서울대 발전 10개년계획: 연구보고서> 발표: 대학발전의 기본목표를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설정함. “학사과정 중심대학에서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시킨다.”
- 1983년 6월 ‘제2차 중흥계획안’의 구상
- 1983년 12월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기획위원회의 연구보고서)
-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1987~2001> 발표
- 1995년 1월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발표
-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발전자문위원회) 발표
- 2001년 12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창조: 서울대학교 사례연구> 발표
- 2003년 9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11)> 발표
- 2004년 2월 <학사구조개선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 발표
- 2007년 11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7~2025> 발표

(2) 이제 주로 핵심적인 표제어를 통해 위의 발전계획안들이 보여주는 서울대의 자기정체성의 윤곽을 그려보자.

- ①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1968~77)>(1968)
‘대학교육의 강화,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
- ②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1983)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서울대학교, 1983)

③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1987)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계획은 목표 연도인 2001년에는 본교의 학문분야 중 50%의 분야에서 미국의 해당 분야 상위 10~20위권의 대학에 필적하는 연구업적이 산출되고, 이들 대학수준에 버금가는 박사급 인력이 양성되며” 이를 위해 “대학조직의 개편, 학사제도의 개선, 대학 행·재정의 효율화 및 캠퍼스의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학부생 감축, 교수의 정원 확대, 학부제의 도입, 연구소에 박사후과정 연구원 도입, 도서관 확충, 강의책임시간의 감축, 연구년제의 정착화, 교수연구평가제, 모든 교수에 기본연구경비 지급, 평의원회 구성, 부교수부터는 정년보장제도 도입, 서울대학교법의 제정 추진, 총장의 예산권 일부 도입, 소요예산과 그 조달방법 등. (전제) “향후 15년간에 걸친 본교의 예산증가율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계획사업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유의하고 있다”(서울대학교, 1987).

④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1995)

‘국제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이란 “학문의 기초이론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교수요원, 연구요원 등 고급두뇌를 자력 생산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학문분야 중 50% 이상의 분야에서 세계의 해당분야 상위 20위권의 대학에 필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학사과정보다는 대학원과정을, 교육보다는 연구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연구중심대학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대학원중심대학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인다.

전체적으로 세계화,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국에의 학문적 의존성향을 탈피”, “교수 및 연구요원을 양성·공급함으로써 박사급 고급두뇌를 포함한 고급인력의 자력 공급 비율을 높임.” “아시아권의 중심대학”, “세계 일류의 대학” 등의 표현도 보인다. 10대 발전전략으로 ‘서울대학교법’의 추진, 교수의 획기적 증원, ‘학부대학’ 설치와 법대, 사대, 의대, 치대 등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 ‘평의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고, 제2캠퍼스 신설 등을 제시한다(서울대학교, 1995).

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1998)

발전목표로 “세계 최상위권 연구중심대학”을 제시하고, ‘발전계획안’에서 ‘대학원 중심대학’이란 용어가 사라진다. 고등교육 개혁, 교육개방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남북통일에 대비한 대학발전계획 구상이라는 표현이 보이며, 대학원의 위상 강화와 ‘학부대학’의 설치를 제안한다(서울대학교, 1998).

⑥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창조: 서울대학교 사례연구>(2001)

서울대는 대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교육개선패널(Blue Ribbon Panel)’[대표: 헨리 로좁스키(Henry Rosovsky) 하버드대학 교수]를 조직하고는 2001년 12월에 이 패널의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서울대가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기업경영전문의 상담회사인 맥킨지(Mckinsey)와 공동작업을 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우리 대학의 역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고서의 제목이나 패널의 구성에서 이미 특정대학 모형을 상정하고 있음이 너무도 생경하여 당시 ‘보고서’를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새롭다.

먼저 ‘보고서’는 서울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현재의 서울대학교 운영구조(Governance structure)와 행정체계는 권한과 책무가 확실치 않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세계적 대학이 되기에는 열악한 수준이며, 그나마 안정적이지도 못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가 중요 학문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점이다. (...) 세계적 수준의 다른 대학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 학문적 수월성을 고양할 수 있는 체계와 방안을 서울대학교는 갖고 있지 않다.” ‘보고서’가 대학 운영체계의 미비함을 대학 발전의 주요한 저해요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음은 일단 우리의 주목에 값할만하다고 생각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진단에 입각하여 세 가지 추진방향과 열한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우리의 문제의식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 1: 적절한 학교 경영구조의 수립

- 추진과제 1: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총장을 임명하고,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정부와 협상하며, 대학당국에게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할 이사회(board of trustees)를 구성한다.

- 추진과제 2: 핵심직책(총장 및 학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임명절차를 개정하며, 주요 직책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대학 행정본부의 역할을 재편하고 강화한다.
- 추진과제 3: 대학경영의 공동수행(shared governance)을 통해 교수들이 대학행정본부에 의미 있는 조언을 하고, 대학에 대한 책임(커리큘럼의 작성 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교수평의회, faculty senate)을 마련한다.

목표 2: 적절한 평가 및 세계적인 표준(world-class standards)을 토대로 최고의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

- 추진과제 4: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각 학과의 학문적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추진과제 7: 서울대에 행정직원을 채용하고 계발할 수 있는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한다.

목표 3: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분배

- 추진과제 10: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 부차적인 자금원의 창출 등을 포함한 — 자금조달 메커니즘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다.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감할 수 있으나, 기본 정신에 있어서는 보고서 번역 투의 거친 문장만큼이나 서울대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미국 연구대학의 운영체제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어 매우 낯설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14명 내외의 학내외 인사(3명의 정부대표 포함)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학경영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총장을 선임하고, 학장 등 주요 행정책임자는 총장이 판단하여 선임한다. 총·학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들의 임기는 적어도 5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그 반면에 이사회는 총장의 직무를 감독하고 정부와 대학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며 교수의회가 학사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져 총장과 책임과 권한을 분담한다.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임명권을 가지며, 교수계약제는 전면화되고,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된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이사회와 총장 중심의 새로운 대학운영체제의 확립, 교수평가제의 강화 및 경쟁풍토의 조성, 국고 외의 외부재정지원의 증대 등, 미국식의 연구대

학을 모델로 하여 신자유주의적인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다. 돌이켜 볼 때, 이것은 서울대 법인화를 노골적으로 제안한 최초의 본격적인 보고서였다.

‘보고서’가 나오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즉각 내용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구와는 다른 우리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여건 등은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제안들이 과연 우리의 사회에서 적실성을 갖는 것인지, 또 갑자기 시행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뒤따를지 등에 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사회는 아직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을 지배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사교모임으로 전락하기 십상일 것이다.” “교수협의회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을 신봉해서가 아니라, 대학을 바로 세우면서도 우리가 취할 바의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오직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있음에 믿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규범을 확립시키는 일이다.”

⑦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2~11>(2002)

서울대학교의 목표가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10년 안에 서울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로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제시한다(서울대학교, 2002).

⑧ <학사구조개선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2004)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구조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그 개편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흥미롭게도 대학원 중심대학을 육성한다는 그간의 정책이 일반대학원의 양적 팽창을 야기하는 잘못을 범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는 “기초학문과 응용 또는 종합 학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학사과정의 학부대학, 전문대학원, 그리고 일반대학원의 삼원체제로의 개편”을 요청한다. 이 연구가 제안한 내용의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학부대학(the University College)을 창설하여 학사과정교육을 전담한다. 단 공과대학, 미술대학, 그리고 음악대학의 학사과정은 유지한다.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재의 학사과정 대학들은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현재의 일반대학원은 존속시킨다”(황수익 외, 2004).

⑨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7~2025>(2007)

서울대학교의 사명을 “가. 서울대학교는 올바른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나.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지적 역량을 모아 21세기를 이끌어갈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여 학문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한다.” “다. 서울대학교는 ‘겨레의 대학’으로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의 대학’으로서 인류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고 적시하고는, 발전 목표로서 1) 교육의 혁신과 내실화, 2) 통합적 학사조직과 연구체제 구축, 3) 종합적 발전지표 설정(“• 2010년 ‘세계 50대 대학’으로 발전, 100여 개 학문분야 중 ‘10개 분야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 • 2015년 ‘세계 30대 대학’으로 도약 • 2025년 ‘세계 10권 대학’으로 비약”)을, 발전 방향으로 1) “자율적 내부 개혁과 대폭적인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과, 2) “형평성과 수월성”, “균형과 집중”, “효율성과 자율성”, 곧 융화, 개방, 다양성의 운영 원칙을 제시한다. 더 구체적으로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운영체제 혁신, 미래사회 인재 육성,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확보, 국제화체제 강화, 중점분야의 세계적 연구 수월성 확보, 첨단 및 융합분야 육성, 한국학 진흥 및 세계화,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 조성, 장학·복지제도 개선, 대학재정의 획기적 확충, 교육·연구윤리 강화, 사회 속의 대학 구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한다(서울대학교, 2007).

(3) 발전방향에 대한 자기인식

① 연구대학이라는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

서울대는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신생국이 필요로 하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학부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연구의 부진 내지 독자적인 학문 배양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이것은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모델로 집약되었다. 다만 그 용어가 학부과정의 폐지나 그것의 소홀한 대접을 함의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었고 최근에는 ‘연구대학’이라는 더 명쾌한 표현으로 정착하였다. 아울러 용어의 변화와 관련하여 학부생의 축소, ‘학부대학’의 설치, ‘학부제’, 기초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이중구조 등을 포함하는 학제의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연구대학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대학교를 ‘교육연구기관’으로 인식하려는 최근의 태도 변화는 발전방향에 대한 더 구체적인 모종의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②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내지 부족

연구대학의 정체성, 즉 무엇을 위한 연구대학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서울대의 실상이 아닌가 한다. 흔히 수월성을 강조하거나 ‘세계 수준’ 운운하나 그 연구대학이 우리의 삶이나 미래의 전망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으며, 미국대학을 보편적인 척도로 보는 일종의 물신숭배에 전반적으로 매몰되어 있다. 이는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대학이념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더 근본적으로 서울대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내부에서 진지한 모색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③ 대학의 자치에 대한 배려의 부족

대학구성원, 특히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위에서 지적한 서울대의 정체성이 아직껏 정립되지 못한 데는 이렇듯 비판정신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제대로 소화하려는 노력이나 인식 자체의 부재, 곧 학문과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한다.

④ 서울대 발전계획안들의 현실적 무능력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1968~77)’만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정부의 지원 아래 상당 수준에서 현실화되어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뿐, 나머지의 발전계획안들은 국민, 정권, 정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여 말 그대로 계획안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적어도 1990년 중반 이전까지 서울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우호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국민이나 정부를 설득하는데 게을렀던 서울대의 오블관언주의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제 서울대는 그 명성이 지닌 사회적 위세와 현실적 무능력 사이의 이중구조를 솔직히 인정해야 하며, 국민과 사회, 정부를 설득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서울대 개교 원년 문제를 둘러싼 논의

서울대 구성원들 사이에 서울대의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상존하며, 대학 전체의 수준에서 정체성이 부재하거나 다양화하고 있음은 최근 서울대 개교 원년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이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제안과 이태진 명예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작성한 <국립서울대학교 개교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계기가 되었고, 이후 공청회가 열리고 이를 전후하여 찬반의 논란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대학평의위원회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중간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9).

먼저 개교원년 재조정론의 핵심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박명규 외, 2010: 53). 첫째, 국립서울대학교의 모체는 경성제국대학이 아니다. 경성제국대학의 존재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력 근대화의 성과로 거뒀던 역사적 유산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과오는 없을 것이다. 둘째,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군주 고종이 주도하여 각종 개혁조치가 추진되었고 이때 만들어진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의학교, 농상공학교 등이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서도 계속 그 실체를 유지해 광복을 맞이함으로써 미군정 아래서 출범한 국립서울대학교의 모체가 됐다. 셋째, 국내외 다른 대학들의 개교원년을 살펴보면, 사소한 연결고리만 있어도 가장 빠르고 작은 시작점을 개교원년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연결고리 가운데 가장 빠른 1895년 법관양성소 개소를 서울대학교 개교원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대학교의 역사는 60년인데 단과대학의 역사는 1백년으로 잡는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를 삼으려거나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개교기념일의 문제도 방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과 제언을 제시했다(박명규 외, 2010: 61-63). 잠정적인 결론은 세 가지이다. (1) 서울대학교 개교원년은 현재의 1946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 출발, 한국사회의 기대와 인식,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자기인식, 그동안의 역사서술 등 모든 점에서 1946년 개교론은 오랫동안 큰 이견이 없이 받아들여져 왔고 수정을 요할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거나 기존이해의 오류가 뚜렷하게 부각된 상태로 보

기도 어렵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의 개교는 식민지시대 경성제국대학과의 연속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해방된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려는 집합적 의지를 분명하게 담은 것이었다. 과거 역사로의 회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래로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식민지적 유산과 전근대적 좌절을 넘어서려는 것이 서울대학교 설립의도 속에 담겨있다. 종합대학교로서의 출발, ‘국민으로서의 조선인민’의 자기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설립의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슬로건, 그리고 국립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단과대학들이 모두 개강한 다음날인 10월 15일을 개교기념일로 결정한 것 등에서 서울대학교 개교와 정체성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2) 각 단과대학의 역사적 연원과 전사(前史)의 성격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밝혀내려는 지적 노력을 적극 지원, 존중하여야 한다. (3) 서울대학교 전체 차원에서는 ‘개교 전사’와 ‘개교 후사’를, 각 단과대학별로는 ‘개교’와 ‘개학’을 구별하여 역사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팀은 아울러 다음의 제언을 덧붙였다. (1)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서울대학교가 무엇을 위한 기관이며 어떤 존재임을 자임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자기성찰, 자기 확인의 작업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진지하게 21세기 서울대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역사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3) 앞으로 ‘서울대학교 70년사’가 편찬될 때, ‘다양한 개교 전사’에 대한 충분한 서술을 할 것을 제안한다. (4)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서울대학교 연구’를 기획,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논의과정에서 연구진의 견해가 모든 점에서 만장일치로 모아 지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대체적인 합의점을 잠정적인 연구결과로 정리하면서 이에 찬성하지 않는 소수견해도 첨가하는 독특한 서술방식을 택했다. 서울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된다.

4) 서울대 법인화 시도 과정에서 드러난 자기정체성

서울대의 자기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절호의 계기가 바로 서울대 법인화이다. 국립대학을 모두 법인화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에 교육당국은 ‘선별적 법인화’로 방향을 틀었고, 이에 서울대 본부가 적극 호응하면서

서울대의 법인화가 급물살을 탔다.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어떻게든 대학발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대학본부의 고민이 결합한 결과로서 이 과정에서 여러 편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서울대의 자기정체성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1) 서울대학교운영체제개선연구T/E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 연구 —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중심으로〉(2006. 7.) “특수법인이 민영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립대학과 특수법인은 소유주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운영의 독립성과 예산의 독립성에 차이가 있다. 국립대학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권한을 가지며 예산상의 책임을 지는 체제이다. 반면 특수법인으로서의 대학은 사회가 소유하되, 대학 구성원 자체가 운영권한을 가지고, 예산상의 책임을 지는 체제이다”(서울대학교, 2006b: 6). 2010년 12월 8일에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은 이런 구분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2)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제4장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법인화 방향’(2007. 3.) 발전 목표로서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중심대학을 제시한다. “서울대가 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받는 각종 제약으로 말미암아 조직, 재정, 학사, 인사운영이 경직되어 있고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서울대학교, 2007: 215).

(3) 서울대학교 평의회,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연구 — 이사회 및 평의회 구성과 권한 문제를 중심으로〉(2007. 12.) 연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과제를 도출·제안함으로써 법인화가 서울대 구성원들의 보편적 기대와 국가발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이사회 및 평의회 구성방식과 바람직한 권한 설정을 제안하고자 한다”(서울대학교 평의회, 2007).

(4)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2009. 3.) 서울대학교의 사명으로서 ‘학문의 대학’, ‘겨레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발전목표로

는 교육의 혁신과 내실화, 통합적 학사조직과 연구체계 구축,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연구기관을 향한 종합적 발전 지표 설정 등을 제시한다. 특히 아래의 표현이 눈에 띈다.

“• 2010년까지 ‘세계 50대 대학’으로 발전하고, 10개 학문분야에서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한다. • 2015년까지 ‘세계 30대 대학’으로 발전하고, 30개 학문분야에서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한다. • 2010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으로 발전하고, 50개 학문분야에서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한다.”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 스스로의 체질개선과 내부혁신의 계기, 나.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율권의 확보, 다. 획기적인 재정확충과 교육·연구역량 강화, 라. 법인화 국립대학의 모델대학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은 서술이 보인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60여 년간 고급인재 양성과 지식창조에 매진하여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국립대학에 대한 규제와 제약을 감수하면서 스스로의 체질개선과 내부혁신 노력을 게을리 하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대적인 모금활동, 기부금의 확충, 수주 연구비의 증대, 수익사업의 활성화, 산학협력과 기술 이전, 전략적 투자 등 재정보호를 위한 가일층의 자구적 노력을 경주할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듯 서울대학교 당국은 법인화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논변을 만드는 가운데 스스로 국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최소한 국립대학이 갖는 불편함을 강조한다. 스스로는 법인화된 서울대가 여전히 국립대학의 틀 안에 있을 것임을 애써 강조함에도,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재정보호방안 등을 보면 법인화라는 것이 사실상 국립대의 민영화를 뜻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간취할 수 있다. 법인화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는 참으로 서울대 내부에서조차 자기인식에서 심각한 교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교란의 핵심 요인은 역시 미국의 대학, 특히 명문사립대학을 ‘세계/글로벌대학’(global university)의 기준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대학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미에서조차 교육과 연구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몰역사적이고 탈맥락적인 이해 내지 오해가 아닌가 한다.²⁾

2) ‘현대 대학’의 동향에 관해서는 클라크(Clark, 1999), Readings(1996), Barrow(1990), Bishop

과연 이런 대학 당국의 자기정체성 혼란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법인화가 서울대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야말로 개헌(改憲)에 준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구성원들의 의사를 묻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생략된 데다가 대학의 대외기구임을 자처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성원 개개인의 성향 못지않게 단과대학에 따라 법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리라는 느낌이다. 어쨌든 법인화를 둘러싸고 나타난 정체성의 혼란은 앞으로 대학당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대의 자기점검과 자기진단을 화급하게 요청하는 또 다른 대목이다.

5)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현주소

서울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제정하여 1991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면모는 서울대가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가치나 덕목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까지 모두 49명이 선정되었는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사망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

1. 이해구(李惠求; 1909~2010) 경성제대 영문과 졸업, 서울 음대 교수, 국악인
2. 이태영(李兌榮; 1914~1998) 법대 졸업,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상 1회, 1991)
3. 장기려(1909~) 경성의전 졸업, 의사(2회, 1992)
4. 김원룡(1922~93) 경성제대 졸업, 학자
5. 허문회(1927~) 농과대학 졸업, 학자(이상 3회, 1993)
6. 임석재(1903~) 경성제대 졸업, 민속학자
7. 김재근(1920~1999) 경성제대 졸업, 조선공학 학자(이상 4회, 1994)
8. 김태길(1920~2009) 문리대 졸업, 철학자
9. 조순탁(1925~1996) 문리대 졸업, 물리학자(이상 5회, 1995)
10. 송영옥(1937~) 법대 졸업, 변호사
11. 오창용(1925~) 수의대 졸업, 서울대공원 동물연구원

(2006) 참조.

12. 장발(1901~2001) 컬럼비아 대학 졸업, 미대 교수 역임
13. 한만년(1925~2004) 문리대 졸업, 출판인
14. 한상기(1920~) 농대 졸업, 원예학자(이상 6회, 1996)
15. 강진구(1927~) 공대 졸업, 기업인(7회, 1997)
16. 이문호(1922~2004) 경성대학 의대 졸업, 학자
17. 기창덕(1924~2000) 치과대학 졸업, 학자(이상 8회, 1998)
18. 김원복(1908~2002) 일본동경고등음악학교 졸업, 음대교수, 최초의 여류 피아니스트
19. 피천득(1910~2007) 중국호강대학 졸업, 사범대 교수, 수필가(이상 9회, 1999)
20. 이회호(1922~) 사범대 졸업, 대통령 영부인
21. 허 응(1918~2004) 문리대 졸업, 학자(이상 10회, 2000)
22. 안철수(1962~) 의대 졸업, 벤처기업인 및 교수
23. 변주선(1940~) 영어교육과 졸업, 보건학 박사,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이상 11회, 2001)
24. 이호왕(1928~) 의대 졸업, 학자
25. 박맹호(1934~) 문리대 졸업, 출판인
26. 손길승(1941~) 상대 졸업, 기업인(이상 12회, 2002)
27. 이길녀(1932~) 의대 졸업, 사학경영인
28. 홍라희(1945~) 미대 졸업, 미술관장, 기업인 부인(이상 13회, 2003)
29. 김윤범(1929~) 의대 졸업, 시카고 의대 교수, 학자
30. 박영주(1941~) 상대 졸업, 기업인(이상 14회, 2004)
31. 이종욱(1945~2006) 의대 졸업, WHO 사무총장
32. 정석규(1929~) 화공과 졸업, 기업인(이상 15회, 2005)
33. 권이혁(1923~) 의대 졸업, 교육부장관
34. 김성호(1937~) 자연대 졸업, 미국 버클리대 교수
35. 김재순(1923~) 상대 졸업, 출판인, 정치인
36. 박영희(1945~) 음대 졸업, 독일 브레멘 예술대 교수
37. 이어령(1934~) 문리대 졸업, 문화인(이상 16회, 2006)
38. 구평희(1926~) 문리대 졸업, 기업인

39. 이현재(1929~) 상대 졸업, 전 국무총리
40. 윤종용(1944~) 공대 졸업, 기업인
41. 박노희(1944~) 치대 졸업, UCLA 치대 학장(이상 17회, 2007)
42. 백낙환(1926~) 의대 졸업, 사학경영자
43. 이구택(1946~) 공대 졸업, 기업인
44. 임광수(1928~) 공대 졸업, 기업인
45. 조 순(1928~) 상대 졸업, 전 부총리(이상 18회, 2008)
46. 김성태(1910~) 연희전문학교 졸업, 음대 교수
47. 노신영(1930~) 법대 졸업, 전 국무총리
48. 손경식(1939~) 법대 졸업, 기업인(이상 19회, 2009)
49. 박병선(1923~) 사범대 졸업, 고문서연구가(20회, 2010)

우리는 위의 명단에서 2000년을 경계로 ‘자랑스러움’에 대한 서울대의 자기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주로 학계인사들이 선정되다가 1997년에 기업인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처음 들어오고는 아예 2000년을 넘어서면서는 주로 기업인(혹은 기부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거나 해외 우수 대학에 근무하는 동문 교수들이 수상자가 되었다. 이 시기가 서울대 본부가 ‘서울대특별법’을 시도하다가 여론의 벽에 부딪혀 실패하자 ‘서울대법인화’로 방향을 틀었던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학문의 대학’을 표방하는 서울대가 사실상 재계에 투항하는 장면은 법인화가 곧 대학의 기업화를 뜻할 수 있음을 냉엄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수상자 가운데 2명(장발, 김성태)이나 ‘서울대학교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발표한 12명의 ‘서울대 1차 친일인물’에 들어있음은,³⁾ 그리고 경성제대 출신이 버젓이 서울대 동문으로 대접받고 있음은 참으로 정체성의 혼란이 서울대 역사의 근저에서 비롯한 것임을 웅변한다.

3) “서울대 일제 청산위, 1차 친일인물 12명 발표”, 오마이뉴스 2005년 4월 7일자.

4.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정체성: 타자가 보는 정체성

여기서는 두 가지 사례를 다룬다. 하나는 지난 노무현 정권 초에 여러 부문에서 제기했던 ‘서울대 폐지론’과, 다른 하나는 최근 한 사립대 총장의 발언과 관련된 것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당시 필자가 작성했던 문건을 그대로 전재하되 정체성과 관련한 물음을 되던진다.

1)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⁴⁾

발표의 목적: 최근에 교육개혁의 화두의 하나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서울대 폐지론’ 내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를 정리하여 토론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정한 합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⁵⁾

(1) 논의의 전개과정

① 발단

서울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시절부터였다. 당시 ‘세계화’의 담론이 등장하면서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학문능력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인식이 학벌주의 및 대학서열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와 맞물리면서 서울대에 대한 비판론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갔다. 사실상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서울대가 잘 대처했다라면 오히려 서울대, 더 나아가 우리 대학체계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이 글은 2004년 6월 10일의 한 서울대 내부 모임에서 발표한 것임.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는 의미에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함.

5) 논의를 정리하는데 박거용(2004)의 도움을 크게 받았음.

1990년대 초 서울대는 적극적인 자기변신을 피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울대는 해방 이후 반세기간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였던 ‘근대화’(민주화 + 산업화)의 과업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이 성공이 — 실패가 아니라 — 결과적으로 서울대에 대한 비판론의 근거로 작용했다. 민주화의 시대적 과제가 일반민주주의의 수준에서나마 일단락되자 서울대 학부졸업생들의 권력엘리트 독점이 심화되어 가는 동시에 정당성을 상실해 갔으며, 산업화를 수행하기 위한 서구학문의 성공적인 도입은 특히 미국학계에 대한 우리 대학들의 학문적 종속을 구조화시켰다. 참으로 우리 대학사의 역설은 근대화와 함께 식민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학문의 종속적 발전, 곧 발전적 종속이 체질화했다는 점이다.⁶⁾

당시 서울대로서 이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자기혁신을 추진했어야 했다. 하나는 ‘출세의 대학’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과 확립이었다. 우리 사회의 밑으로부터의 거대한 변화의 열망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학풍의 수립이 참으로 절실했다. 다른 하나는 자생적인 학문재생산구조를 이룩하여 명실상부한 ‘학문의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내부적인 자기혁신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근거하여 ‘학문의 대학’에 걸맞은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했다.

② ‘폐지론’의 대두

개인적인 주장에 머물던 서울대 폐지론이 공론화된 것은 1996년에 서울대가 ‘서울대학교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이것은 서울대가 학문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지녔지만 철저한 자기혁신을 수반하지 않음으로써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연장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는 신랄한 비판을 초래하였다.

- 정영섭(1996)은 ‘교육황폐화의 주범 국립 서울대를 폐교하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하지만 ‘서울대를 민영화하자’는 엉뚱한 결론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의 모 사립대 교수였다.

- 김종철(1996) 당시 한겨레 논설위원은 서울대 폐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

6)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최갑수(2009) 참조.

로 대학원대학으로의 재편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원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는 사실상 서울대 폐지론에 준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 강준만(1996)은 서울대는 학생 수를 지금의 1/2 규모로 과감하게 자기축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서열구조를 놓고 볼 때, 이는 더 치열한 입시경쟁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③ ‘폐지론’의 본격화

- 정진상(1996)의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 입시지옥 해소와 학벌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은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서울대폐지론’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노동당의 정당의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안)’으로 다듬어져서 정진상(2004)으로 출판되었다.

주요 내용은 • 대학별 입학시험제도(수능시험) 폐지 및 고교내신과 대학입학자격 시험으로 신입생 선발, • 선발은 전체 국립대학의 계열별 총정원으로 집단선발 방식, • 입학대학은 계열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의 지망에 따라 추천방식으로 배정, • 서울대를 포함하는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성, • 서울대는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고 학부를 통합 국립대학 학생들에게 개방, • 지역 국립대학들은 현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부별로 통합하고 몇 개 캠퍼스로 조직, • 학부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 과정(2년)과 2기 과정(2년)으로 구분, •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고 법학부, 사범학부, 의학부(치의학부·한의학부·수의학부), 약학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 폐지 등이다.

이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학문정책의 고려나 이른바 ‘수월성’에 대한 고민을 결여하고, 이공계 인력의 양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대학원 중심대학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하향평준화의 위험성에 입시경쟁이 대학원 수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겹쳐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논의가 이런 수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겹쳐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논의가 이런 수준으로까지 구체화되고 있는나 하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서울대폐지론’을 고민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울대는 국립대체제 전반이라는 더 큰 틀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④ 참여정부의 ‘학벌대책’

노무현 정권은 12대 국정과제에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5대 차별(학벌, 성, 장애 인,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의 해소 과제의 하나로 학벌 타파를 설정했다. 이에 따

라 교육부는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4년 초에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중·장기적으로 국립대 공익법인화, • 고시합격자 가운데 지방대출신자 20% 채용, • 고위직 임용시 출신지역 및 대학 균형 인사 실시, • 국가직무능력표준제(Korean Skills Standard)의 도입,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우대 등이나, 일부에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연 그대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한편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내부논의사항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교육혁신위는 8월까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라며 • 국립대학 공동학위 수여, • 국내 모든 대학 간 공동 수강· 상호 학점 인정과 전학제도의 도입, • 교사가 작성한 ‘교육이력철’을 통한 시험점수 없는 대입 전형 비율 대폭 확대, •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 합격자 지역대학 쿼터 배정, •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면허 교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⁷⁾

한 방송은 교육혁신위원회가 작성한 ‘교육혁신안 — 과제별 세부추진현황’이라는 두터운 책자를 입수하여 ‘서울대 우월성 폐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방송은 책자에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간 인적·물적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대학간 공동 학위제를 추진하도록 돼있다”며 “또 국립대 교수를 공동 선발, 관리해 3년에서 5년 주기로 순환 근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24개 국립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동일한 졸업장을 받게 된다”며 “그 결과 서울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우수 교수의 순환 근무 등으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은 강화된다”고 보도했다. 같은 방송은 이밖에 책자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고시제도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전하고, “중앙 정부에서 선발해 배치하는 공무원을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하는 체제로 바뀌어 국가고시인 행정고시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고 “이와 함께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 직종에 대한 자격증 교부를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며, 이들은 일정기간 그 지역에서만 일한 뒤에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마지막으로

7) 조선일보, 2004년 4월 1일자.

“이런 국립대와 고시제도 개선 방안은 지방 우수인재들의 서울 집중현상을 막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이라고 덧붙였다.⁸⁾

⑤ 서울대 내부의 반응

- 김세균·최갑수(1999)는 “개편의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식과 인재를 독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초학문중심대학이며, 이를 위해 기초학문대학의 통합과 학과 간 및 기초/응용학문의 공조체제의 확립,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대학 간 교류와 유대의 강화, 교육 및 연구 여건의 확충, 대학 자율성의 확보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분담론에 입각한 국립대 발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립대학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사립대학에게 맡기고, 서울대가 몸집을 줄여 사립대학이 하고 싶어도 재정부담이 커서 하지 못하는 기초의학이나 공학, 또는 사립대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기초학문분야를 주로 담당케 하는 방안이다.

- 장희익(2001)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국립대학교 학사과정 개방화 방안’을 서울대 교수 20인의 서명을 받아 제안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한마디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국립대학교들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첫째로 이들 대학들로 하여금 세계 정상급의 연구 및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며, 둘째로 학사과정 교육에 관한 한 한시적으로(10년 시행 후 재검토) 서울대학교 명칭의 입학생과 졸업생을 내지 않으면서도 국내 최우수 교육 기관 수준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서울대 학사과정 입학 정원은 10개 이내의 여타 협력 대학교들에 배정하여 이들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한편, 서울대학교는 인력과 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열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우고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 황수의 당시 정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대의 ‘학사구조개선위원회’는 2004년 2월에 ‘서울대학교 학사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학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1. 학부대학(the

8) SBS, 2004년 6월 8일 8시 뉴스; 프레시안, 2004년 4월 9일자.

University College)을 창설하여 학사과정교육을 전담한다. 단 공과대학, 미술대학 그리고 음악대학의 학사과정은 유지한다.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재의 학사과정 대학들은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현재의 일반대학원(the Graduate Schoo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을 존속시킨다”(황수의 외, 2004).⁹⁾

- 정운찬(2004) 당시 총장은 ‘특별기고’를 통해 폐지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대 개혁안을 밝혔다. “앞으로 추진될 서울대 학사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초기에는 교육단위, 그리고 여건이 성숙되면 모집단위로서의 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의 설치입니다. 학부대학 체제는 기초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초학문의 발전과 이를 발판으로 한 응용 또는 종합학문의 동반적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부대학과 함께 전문영역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존의 단과대학들이 서울대의 학사과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의 설립입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도입을 천명한 단계에 있습니다만 사법개혁안이 구체화되면 뒤를 이어 출범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학사과정교육의 기초 위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는 분야들이 발전적 개편을 통해 전문대학원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는 고등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는 전문대학원 도입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담당하는 일반대학원의 강화입니다. 서울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지식의 창출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매진하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학사구조개선위원회의 제안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서 서울대는 이후 당분간 이런 방향으로의 개혁 작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다.

9) 김남두·이성원(2004)는 바로 이 학부대학의 교육내용을 위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며, 그러기에 그 연구보고서는 곧 서울대학교의 공식보고서로 채택되어 전 교수들에게 배포되었다.

(2) '서울대 폐지 내지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① 고등교육의 공교육화

현재 전 세계의 고등교육체계는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대학만이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며 모든 대학이 국공립대학인 경우로 이탈리아, 에스파냐, 그리스, 스웨덴 등이 그러하다. 둘째는 고등교육기관이 대학 이외에 사범학교나 직업기술 학교 등으로 다양하지만 모두가 국공립인 경우로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셋째는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이 다양하고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과 공립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로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넷째는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이 다양하고 설립도 사립과 국립, 공립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로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고등교육체제는 위의 네 번째와 유사하지만 “사립 중심의 교육기회 제공과 국립대학과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발달 및 서열구조의 형성이 특징인 사립과 4년제 대학중심체제이다”(강명숙, 2004: 115). 게다가 그 사립은 특유하게도 특정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천박한 대학관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대학개혁의 방향은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립대의 국공립화가 되어야 한다.

②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분담

서울대 개혁은 국립대의 역할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국립대학 전체의 틀 속에서 서울대 개혁을 사고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연계와 역할 분담과 권역별 구조조정, 이런 관점과 틀이 없이는 학문의 자생적 재생산구조를 만들 수 없다.

④ 대학문제의 접근에는 입시정책만이 아니라 학문정책의 관점이 함께 해야 한다. 대학원대학의 실험은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⑤ '서울대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반성할 것은 정체성이 없는 출세지향주의,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능력주의,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접목되지 못한 학문풍토이며, 살려야 할 것은 그간 키어온 연구능력이다. 무엇보다도 서울대 구성원들의 맹렬한 자기반성과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내부개혁이 절실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서울대를 '학문의 대학'으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⑥ '서울대연구'의 필요성

⑦ 그러한 진단과 연구의 기반 위에서 서울대는 학풍을 일신하기 위해 제2의 ‘건학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서울대 폐교론은 서울대를 교육황폐화의 주범으로 보아 폐교에 준하는 과격한 조치를 통해 기존의 고등교육체제를 일신하자는 일종의 ‘충격요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당시에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개혁적인 인사조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희성 시인이 1970년대 초에 노래했던 시¹⁰⁾에 보이는 자공의 대상이던 서울대가 1990년대 후반에 오면 학벌의 폐해와 대학서열체제의 원흉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서울대의 사회적 정체성에 참으로 지각변동이랄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이다. 서울대 구성원들은 왜 그 책임을 우리만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항변하기에 앞서, 이런 변화가 왜 초래되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런 유의 사회적 정체성은 현재 서울대가 직면하고 있는 난관 가운데서도 가장 곤혹스런 것이다. ‘서울대 폐지론’은 최근에 잠잠해졌지만, 우리 사회 일반에 깊숙이 내장되어 있는 정서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만큼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한 서울대 구성원들의 진지한 노력이 참으로 절실하다.

2) 한 사립대 총장의 발언

다음으로 최근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발언 파문을 살펴보자.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 총장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다른 대학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는데, 우리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가 서울대에 대해 한 발언의 내용 때문이다. 그는 올 9월 6일에 강의 중 “(한 학생이) 의견을 줬는데, 고려대가 대한민국 제1대학이 될 수 있는가, 해결책은 뭔가 (물었다). 이미 고려대가 대한민국 제일 대학 아닌가”라고 하면서 “국립대학은 해방되고 국립대학이었지, 그 전에는 일본이 침략을 위한 방편으로 만든 관립대학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대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총장은 이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대학은 사립대에서 찾아야

10) 이 글의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했음.

하고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인데, 연대는 기독교 대학이지 대한민국 대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대, 이대는 기독교 전파의 수단으로 만든 대학이었다. 연대 개교 기념식 단상에 7명이 있었는데 김한중 총장 이외에 전부 목사였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민족을 위한 민립대학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대학, 제1의 대학이 고려대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결국 사립대학이 잘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대도 이장무 (진) 총장이 (법인화) 기본 계획을 세웠다. 자본주의 경제하에 대학의 역할은 사립대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¹¹⁾

이기수의 발언은 타 대학을 비하한다고 하여 비판을 받았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우리 고등교육의 현주소를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의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사실 타 대학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사립대학을 우리 고등교육의 근간으로 보고, 그렇게 만든 요인을 자본주의 경제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미국의 고등교육체제만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제3세계는 고사하고 유럽을 보더라도 전적으로 틀린 얘기다. 또한 미국은 국가형성의 특수성으로 국립대학 자체가 없어 그 사립대학의 성격이 우리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억지추향적 주장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최근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신자유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서울의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지방의 국립대학들을 앞질렀고, 이 총장의 발언은 이런 자신감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그는 바로 그렇기에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법인화를 기본적으로 사립화, 곧 민영화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서울대의 법인화가 외부에 비쳐지는 본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를 경성제대의 후신으로 보고 있는데, 그간 서울대가 스스로 ‘겨레의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려고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평가를 받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총장의 발언은 타 대학 비하라고 폄하하기에는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에 대해 정곡을 찌르고 있다. 과연 이렇게 된 데 서울대의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

11) “서울대 일제침략 방편으로 세운 대학”, 경향닷컴 2010년 9월 6일자.

5. 정체성의 현실과 새로운 모색: ‘글로벌 대학’에서 ‘글로벌 대학’으로

현재 서울대의 정체성은 심각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대가 ‘학문의 대학’과 ‘출세의 대학’이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부동(浮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대는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국내 최고 내지 이에 준하는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구미학문의 수입상의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학문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딱히 서울대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예컨대, 대학재정의 부족이나 교육부에 대한 종속과 같은 요인이 없지 않으나 외부에서는 서울대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을 가한다. 사실 자립적인 지식생산이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한국대학구조의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대가 그것을 제대로 이룩하고 있지 못함은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대 내부의 인식과 외부의 시선 사이의 엄청난 괴리이다. 서울대 내부에서는 서울대가 학문의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반해, 외부에서는 그것을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행태로, 따라서 서울대를 기득권 집단의 아성으로 인식한다.

더욱이 서울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서울대 구성원 사이에서조차도 어떤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하다. 단과대학마다 정체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경우 학위수여국에 따라 정체성의 기대치가 다른듯하다. 문제는 대학본부나 특히 대학 내의 민주적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진 대학평의원회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관료주의와 함께, 정체성을 성찰하고 보듬으려는 노력 자체가 거의 부재하다는 실정이다. 우리는 학생들을 받아 어떠한 인재로 키우려고 하는가?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이 되려고 하는데, 과연 세계에 이바지할만한 서울대의 자산은 무엇인가? 서울대의 학문적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발전인가, 아니면 그런 정체성을 포기하고 정말 민영화의 길로 가는 것이 발전인가? 서울대가 추구하는 보편적 덕목이 있는지, 있다면 이의 구현을 위해 서울대는 무슨 노력을 하는가? 서울대는 여러 차원의 지역사회와의 연

계를 갖고 있는가?

서울대는 이미 하나의 학문공동체는 아니다.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다. 서울대는 이미 환갑을 지난 나이이며, 다양한 전사(前史)와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층적이며 경우에 따라 모순적인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지난 60년간에 우리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탈근대산업사회로, 우리 국가는 신생 권위주의국가에서 질차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했다. 당연히 고등교육의 위상과 역할에도 엄청난 변화가 초래됐다. 그것은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근대화, 서구화의 창구에서 원천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식생태계로의 도약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거래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시민주의의 차원으로까지 전망의 지평을 넓힐 것을 요청받고 있다. 참으로 '겨레의 대학', '학문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라는 3차원적 정체성의 확립을 함께 기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서울대는 안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대가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학문의 대학'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은 불가결하다. 하지만 서울대의 현재의 정체성으로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정부의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나는 이를 위해 서울대가 '민족의 대학'과 '세계의 대학'이라는 상보적인 동시에 상반되는 두 개의 가치를 긴밀하게 결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럴 때만이 자기정체성과 사회적인 정체성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맹렬한 자기반성이 불가피하다. 즉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보듬고 사회적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내화할 수 있는 자기혁신이 참으로 절실하며, 아울러 보편주의, 평화, 인권, 다양성, 환경, 민주주의 등을 갖춘 세계시민주의에 기반을 둔 새 학풍(學風)의 진작을 꾀해야 한다. 참으로 서울대는 '제2의 60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학(建學)운동'을 벌여야 할 절체절명의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21세기의 서울대가 추구할 정체성의 상(像)으로서 '글로벌(global) 대학'을 제시한다. 서울대 당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주요 사립 및 주립대학을 준거로 하여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 곧 '세계(global) 대학'을 발전의 지향으로 내세워왔다. 애초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을 주요한 덕목의 하나로 내세웠고, 또 성찰적인 세계시민의 양성이 서울대 교육의 목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

다. 하지만 ‘글로벌 대학’이란 학문의 주체화 기획이 배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구미, 특히 미국의 문화적 패권을 그대로 재생산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우리 대학이 학문적 종속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우리 대학이 그야말로 인문, 사회, 자연에 관한 토대적 지식을 생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 관악구, 서울시, 남한, 한반도, 동아시아, 태평양, 전 지구 및 인류 등의 여러 차원의 ‘지방성’(locality) — 의 복리와 평화에 기여하려면 세계 수준의 수월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주체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더욱이 ‘민족의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놓친다면 ‘세계의 대학’이 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기에 우리는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 전략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참으로 ‘글로벌(중국어로 전구 지방화全球地方化) 대학’이야말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대학발전전략이 아닐 수 없다.¹²⁾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한다. 근대국가가 ‘인구센서스’ 조사와 함께 태어난 ‘지식국가’이듯이, 서울대 역시 자신의 존재성 자체를 문제항으로 설정하는 ‘현대 대학’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의 자기점검은 최소한의 요구이다. 현재 일부 언론사가 행하는 대학평가는 신자유주의를 대학에 부식하려는 도구적 성격을 갖는 반면에, 아래의 ‘대학학’(大學學)적 과제들은 과거와 현재의 진단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성찰적 성격을 갖는다.

하나의 문화연구로서 ‘서울대연구’ 내지 ‘서울대학(서울大:學 science of SNU; Snulogy)’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시, 교육, 연구의 세 차원에서 학문의 근대성과 종속성의 병행발전의 한 사례연구가 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이룩한 ‘근대성’의 세계사적 위치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통계의 작성 및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본부의 차원에서 보이는 정체성, 단과대학의 역사적 정체성, 서울대가 담고 있는 다양한 학문의 성격과 지향, 서울대의 상징물 — 교기(校旗), 정장(正章), 교목(校木), 교조(校鳥), 교가(校歌) 등 — 그리고 교수 및 학생이 보는 정체성, 서울대의 학습문화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의 축장과 인식 공유를 위해 ‘서울대학교 역사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12) glocal은 global과 local의 합성어이다. ‘세계화’와 ‘지방화’, ‘글로벌’과 ‘글로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최갑수(2009) 참조.

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대의 지식생태계를 ‘세계성’으로 끌어올리고 ‘지방성’으로 하방(下放)하는 구체적인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¹³⁾
-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기공식에 부쳐

정희성

그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冠岳)을 보게 하라.
이마가 시원한 봉우리
기슭이마다 어린 예지의 서기(瑞氣)가
오랜 주라기의 지층(地層)을 씻어 내린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듯이
관악의 이마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이여
영원한 생명의 티전이여.

겨레의 염원으로 기약한 이 날
헤어졌던 이마를 비로소 마주대고
여기 새로 땅을 열어
한 얼의 슬기를 불 밝히니
“진리는 나의 빛”
이 불이 밝히는
오 한 세대의 확고한 길을 보아라
온갖 불의와 사악과
어둠의 검은 손이 눈을 가릴 때에도
그 어두움의 정수리를 가르며 빛나던 예지여

13) 이 시는 《대학신문》 1971년 4월 5일자 1면에 발표되었고, 정희성(1978: 90-92)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정희성은 1945년생으로 본교 국문과 1964년 입학생이다. 서울대학교(2006a)의 기념사(iii) 모두(冒頭)에서 당시 이장무 총장은 이 시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

역사의 갈피마다 슬기롭던
아 우리의 서울대학교.

뼈 있는 자의 길을 보아라
뼈 있는 자가 남기는 이념의 단단한 뼈를 보아라
저마다 가슴 깊이 사려둔 이념은
오직 살아있는 자의 골수에 깃드니
속으로 트이는 이 길을
오 위대한 세대의 확고한 길을 보아라
만년 응비(雄飛)의 새 터전
이 영봉(靈峰)과 저 기슭에 어린 서기(暑氣)들
가슴에 서리담은 민족의 대학
불처럼 일어서는 세계의 대학
이 충만한 빛 기증을 보아라.
온갖 어두움을 가르며
빛이 빛을 따르고
뼈가 뼈를 따르고
산이 산을 불러 일어서니
또한 타오르는 이 길을
영원한 세대의 확고한 길을 보아라.

겨레의 뜻으로 기약한 이 날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민족의 위대한 상속자
아 기리 빛날 서울대학교
타오르는 빛의 성전(聖殿) 예 있으니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참고문헌

- 강명숙(2002),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4), “고등교육 위상의 역사적 변화”, 《역사비평》 67.
- 강준만(1996), 《서울대의 나라》, 개마고원.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남두·이성원(2004), “서울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일반교육과 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김세균·최갑수(1999), “서울대학교 구조조정, 이렇게 하자”, 서울대 민교협 춘계토론회 (1999년 4월 14일).
- 김종철(1996), “서울대 폐교론”,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9일자.
- 바로우, 클라우드(2011), 《대학과 자본주의 국가》, 박거용 역, 문화과학사.
- 박거용(2004),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역사비평》 67: 22-43.
- 박명규 외(2010), <서울대학교 개교에 관한 연구보고서(초)>.
- 법제처 연혁법령(1946),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군정법령 제102호(1946년 8월 22일 제정).
- 서울대학교(1979),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 연구보고서>, 기획위원회.
- _____(1983),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 기획위원회.
- _____(1987), <서울대학교 발전 장기계획: 1987~2001>.
- _____(1995),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 _____(1998),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 발전자문위원회.
- _____(2001),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창조: 서울대학교 사례연구>.
- _____(2002),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2-2011>, 장기발전계획연구위원회.
- _____(2006a), 《서울대학교 60년사》.
- _____(2006b),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 연구 —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운영체제개선연구T/E.
- _____(2007),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7-2025>.
- _____(2009),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 법인화위원회.
- 서울대학교 평의회(2007),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연구 — 이사회 및 평의회 구성과 권한 문제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2009), 《정통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 삶과 꿈.
- 우마코시, 토루(2000),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 대학모델의 전파연구》, 한용진

역, 교육과학사.

장희익(2001), “대학간 협력을 통한 국립대학교 학사과정 개방화 방안”(2001년 4월 20일)(미간행)

정영섭(1996), “교육황폐화의 주범 국립 서울대를 폐교하라”, 《월간 원》 1996년 2월호.

정운찬(2004), “서울대 폐지논쟁 중단을”, 《조선일보》 2004년 6월 4일자 특별기고.

정진상(1996),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 입시지옥 해소와 학벌타파를 위한 정책 대안”(미간행)

_____(2004),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 책세상.

정희성(1971),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 《대학신문》 4월 5일자 1면.

_____(1978),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창작과비평사.

최갑수(2009), “한국의 대학과 한국”, 《인문학연구》 43: 5-29.

_____(2009),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역사학”, 《인문연구》 57: 1-32.

클라크, 버튼(1999), 《연구중심대학의 형성과 발전》, 고용 외 역, 문음사.

황수익 외(2004), <학사구조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Bishop, Ryan (2006), “The Global University,” *Theory, Culture & Society* 23.

Readings, Bill (1996), *The University in Rui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기타 자료>

경향닷컴, “서울대 일제침략 방편으로 세운 대학”, 2010년 9월 6일자(2010년 10월 3일에 접속)

오마이뉴스, “서울대 일제 청산위, 1차 친일인물 12명 발표”, 2005년 4월 7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7516) (2010년 12월 13일 접속)

조선일보, 2004년 4월 1일자.

프레시안, 2004년 4월 9일자.

SBS, 2004년 6월 8일 저녁 8시 뉴스.

For the Maki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New Identity

Choi, Kab-Soo*

There are three kinds of identity: historical identity, self-identity, and social identity. It is rare that three kinds of identity correspond with one another, and especially it would be bound that there is always a certain distance between self-identity and social identity. Also there could be instances where historical identity and self-identity collide head-on. A serious problem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identities is that its identity as a national university are rapidly eroding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ere are gaps and misunderstandings between three kinds of its identity which are indeed easily irreconcilable. Particularly there is a deep divide difficult to bridge between self-identity of SNU and laymen's perceptions. It is one of basic factors of current 'SNU problem'.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 suggest 'the glocal university' as model of new identity that SNU should pursue in the 21st century. And I propose 'the study of SNU/Snology' as a part of preliminary works to take a concrete form of it. Eventually it should be made a development strategy to raise the ecosystem of knowledge of SNU into the level of 'globality' and to go down it into several dimension of 'locality' on the basis of Snology.

Keywords: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System, Global University, Glocal University, Identity, Controversy over the Reform of SNU, Triumphant Member of SNU

* Professor, Dept. of Wester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